

社 說

부단한 탐구자세로 도약의 길 다져야 —개강을 맞이하여—

2학기의 개강과 더불어 학교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북적대는 교정, 게시판 가득 매운 대자보, 연구실, 강의실의 형형히 빛나는 눈빛들. 이 모두가 열심히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호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대학교이고, 우리가 바로 대학의 주체인 대학인일진대, 새학기를 맞이하는 것이 그저 관습적인 되풀이여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새로운 각성과 다부진 결심, 실천행위가 수반되어야만 하겠다. 오늘날의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발전의 토대를 확립해야만 하겠다. 기필코 도약해야만 한다. 그런데 도약의 길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경쟁에서 앞설 수는 없다고 없다. 그렇다면 대학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다.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하여 맹신하지 않고, 정당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일말의 여지도 없이 진리로 확정되기까지 부단히 탐구하는 자세, 자료를 찾고 연구방법을 모색하며, 뚜렷한 목적의식을 수립하는 일 등은 학문하는 자들의 기본행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결코 하루 이틀에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체계에 좌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소결을'이나 비유할 우직함과 끈질김, 그 순수한 집념과 정열에다 과학도의 냉철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수가 훌륭한 연구실적을 내놓은 일이나 발군의 재주를 육성하는 일에 그점이 요구되고, 학생이 참다운 자기 성장을 이루하는 일에도 그점이 요구된다. 학교당국과 교직원도 학교 전반과 각 부문을 학문을 위해 역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애정을 쏟아 주신다는 일이 또한 그러하다.

한 가족은 그 구성원들이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협력할 때 크게 번창한다. 대학도 큰 가족이다. 오늘날 이른바 대학구성원의 '재발견'이 각자의 발원지나 이익을 쫓는 기생방식으로 흐르지 말고, 참다운 '제역할찾기'로 회귀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은 없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교수·학생·직원 모두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만이 안타까운 답보상태를 파기하고 우리대학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이요, 각자의 위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만 하겠다.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보장...”

—대학언론 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방학을 이용 대학언론에 대한 현정권의 탄압이 가중되면서 대가에서는 현정권 규탄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 23일 서강대에서 대학언론 탄압분과를 위한 대학언론 선전 일꾼 결의대회'가 서언협 주최로 열렸다. 이는 가중되어만 가는 탄압에 대해 결코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급박한 실정에 이르러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다.

7월에 있었던 본교 및 연대·시립대·단국대·한성대·외대 교외에 대한 탄압과 8월의 있었던 연대·외대·동국대·동덕여대·세종대 신문의사건·현판집장 및 기자·집필자의 연행 및 구속, 신문사 내사...

이러한 지속적인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사태는 지난해 5·6 대학신문 이원화조치발표와 올 4월 개최된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춘계세미나에서 제시된 일련의 구도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주목해 봐야 할 현상은 '대학신문 평정제'라는 직접적이고 물리적 탄압과 학교당국을 통한 간접 탄압, 그리고 대학간행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학언론 탄압 양상을 바꿔 정부와 학교당국이 공동으로 대학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제는 비민주적 탄압에서의 탈피를 제언한다. 진정한 정권이 취해야 할 방법은 자유로운 이념논쟁을 통해 진정한 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대학신문에 대한 검열과 집필자 구속을 중지하는 것이다.

실천대안 못찾는 선언적 통일논의

—현단계 남북한 통일논의를 비교한다—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상부구조까지 이르는 통합을 점진적으로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통일정책은 통일을 모든 것에 선행하는 민족적 당위로 설정해 놓고 있다. 북한은 최고 당국 자회담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정치·

리고 서로 다른 체제의 대립이라는 상황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총선거방식에는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구체적인 비교

통일의 주체는 분단상황에서 빚어지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민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론은 문익환의

진할 수임기구로 최고민족연방의 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일방안의 결정과정이나 추진과정에 북한주민의 의사가 어느정도 수렴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면 북한 역시 당국자에 의해서 통일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남한의 통일론들은 3단계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남북한이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한다는 기본 원칙만 세워 놓았을 뿐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신 북한의 통일론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불가침선언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의 통일론에서는 민족회의 통일론이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요구되는바 남한의 통일론이 이 통일로 가는 단계를 구분하고, 북한의 통일론이 전체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 통일을 이루는데에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남한의 통일론은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까닭에 주변국과의 관계설정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북한은 남북한간에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대외적으로는 비동맹중립과 외세 배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 —다각적 상호교류로 동질성 찾으려는 기능주의고수

통일을 민족적 당위로 설정, 정치·군사문제 우선시—

군사문제 우선주의라는 입장에서 이다.

III. 통일논의의 전개

지금까지의 남한에서는 정부가 통일논의를 일방적으로 독점해 왔다. 그러나 통일의 주체인 전민족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론은 폭넓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남한 내부에 다양한 통일논의가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남한정부가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1982년 1월에 전두환정권이 제시했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었다. 남한의 통일론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남북교류가 시작되는 1970년대 이후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4월혁명기를 제외하면 통일논의가 금기시되어왔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에서 시종일관 내세웠던 북진통일론의 내용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합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통일론이라 할 수 없다. 70년대 이전의 박정희정권의 통일론도 '선전선투통일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유전한 단계였다.

이 시기까지 남북한 모두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였지만 그 내용은 달랐다. 남한은 유엔감시하의, 북한은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를 주장함으로써 합의의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전두환정권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바탕에도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방식이 깔려있다. 전두환정권의 통일론을 토대로 한 것이 바로 노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과거의 정책을 기초로 하여 분단의 합법화와 남한이 주체가 되는 일방적 흡수통합을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식방안 이외에 민간의 대표적인 통일론으로는 문익환이 주장하는 연방제 3단계 통일방안과 김대중이 내세우는 '평화국권방제' 및 김낙중의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 등이 있다.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도 그 노선에 따라 다양한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통일론으로서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와 김낙중의 통일론은 '민족1국가1체제'를, 북한·문익환·김대중의 통일론은 양체제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론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은 1980년 6월에 있었던 제6차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전까지 북한의 통일론은 평화통일노선에 입각한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방식이었다. 그후 남북총선거 방식을 고수하면서 과도기적 존재로서 연방제를 결합하면서 연방제가 대두되었다. 연방제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서 완결됨으로써 총선거 방식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V. 맺음말

범민족대회가 결국 남과 북에서 따로 치루어졌지만 남한사회에서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역량강화와 민족구성원의 통일외교가 강력함을 반증할 수 있다.

객관적 정세의 변화와 주체적 역량의 강화는 우리의 통일을 더욱 앞당길 것이다. 민족구성원의 강렬한 통합의지로 민족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손혁재

〈본교 민족통일론 강사〉



책속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게를 켜는 知性—
시선을 거두어 다시금 책 가운데로 모은다.
그 얼마나 뜨거웠던 여름이었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책을 펴낸다.
하나하나의 활자가 새롭게 느껴진다.
쑥— 단숨에 한페이지를 읽어 내려간다.
스르륵— 책장넘기는 소리는 한여름의 파도소리보다 더 시원하다.
장작불처럼 뜨거웠던 태양도 식어가는 지금,
마음은 탐구의 열기로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이제 책속에 마음을 묻어라.
아마 몇년 2학기, 나의 知性이 튼튼하게 살려져
보람있는 한학기가 될지야.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